



Global Market Report 14-031

2014.08.11

일본 소비세 인상 이후 3개월 동향 분석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목 차

요 약

1

I. 소비세 인상 조치 내용

- 3 | 1. 인상 배경
- 4 | 2. 추진경과 : 소비세도입 및 세율인상 추진 경과
- 5 | 3. 과거 소비세 인상에 대한 영향 분석
- 4. 2015년 추가 인상 가능성(8%→10%)

II. 소비세 인상 이후 3개월 동향 분석

- 6 | 1. 소비세 인상에 따른 사전 가수요(사재기)의 영향력
- 7 | 2. 증세가 소매업에 미친 영향
- 8 | 3. 소비심리, 기업구매심리 등 전망지표

III. 일본정부의 대책과 향후 계획

- 9 | 1. 일본정부의 대책 및 향후 예상되는 조치

IV.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10 | 1.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
- 12 | 2. 대일본 투자 유치

V. 시사점

※ 참고자료

요 약

- (인상 배경) 첫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국가재정 적자
 - 장기간 지속된 세출입의 불균형으로 일본의 장기 채무 잔고는 2012년 말 약 940조엔, GDP 대비 198%를 기록
 - 둘째,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통한 재정 건전화 필요성 대두
 - －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기초연금액 증가
 - － 2009년도에 국가가 부담하는 기초연금의 총당비용이 과거 기초연금의 3분의 1 수준에서 2분의 1로 증가
- (추진경과) 2013년 G8 정상회의, 일본에 중장기적 재정계획 수립요구
 - 일본의 국가 신용도 하락 가능성 제기
 - 아베 총리는 2013년 10월 1일, 2014년 4월에 소비세율을 인상 (5%→ 8%)하기로 결정
- (과거 소비세 인상 후 영향) 1997년 소비세 인상 이후 가계소비 급감
 - 1997년 소비세 인상(3%→5%)으로 2분기 이후 개인소비가 급감하여 경기침체
 - *'97년 소비증가율 : 4.0%(1분기)→△5.4% (2분기)→1.6%(3분기)→△2.0%(4분기)
- (2015년 추가 인상 가능성) 8%→10%
 - 일본정부, 7~9월 경제지표 확인 후 최종 결정 예정
 - 2% 대의 경제성장률이 필수 조건
- (소비세 인상 이후 3개월간의 동향) 소비세 인상에 따른 사전 가수요(사재기)의 영향력
 - '97년 1차 소비세 인상 때 보다 가계소비지출의 감소량 증가
 - 소비세 인상 직전 사전 가수요(사재기)가 원인

□ 증세가 소매업에 미친 영향

- 주요 분야별 소매 판매 동향
 - (자동차 판매) 6월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동일한 수준 유지
 - (가전대형소매점) 7월 셋째 주 주요 5개 품목의 판매량 증가
 - (식료품) 7월 셋째 주 전년대비 약 6% 감소
 - (대형백화점) 여름 할인 행사로 매출 증대

□ 소비심리, 기업구매심리 등 전망지표

- (경기동향지수 호전) 6월 내각부 조사에서 2개월 연속 상승

□ (일본정부의 대책 및 향후 계획) 기업 감세를 위한 경제 대책 준비

- 일본 정부, 기업 감세를 위한 5조엔 규모의 경제 대책 표명
- ‘경기의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경제 대책
 - 일본 내각부는 소비세 증세 후의 경기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추경예산 편성 및 국가사업 추진(7. 28 발표)

□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 및 투자 유치

- 일본, 증세 이후 실수입 하락세
 - 순수출(실수출-실수입)은 증가
 - 한국의 대일 수출의 금액은 감소했으나, 전년 대비 증가율에 큰 변화는 없음
- 일본의 대외 직접투자가 다소 감소 추세
 - 대한민국 투자금액도 감소했으나 이것을 소비세 증세와 연관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

□ (시사점) 국적과 기업에 관계없이 소비세 인상의 영향은 미미

- 증세로 인해 한·일 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 가격 경쟁력 강화와 함께 상품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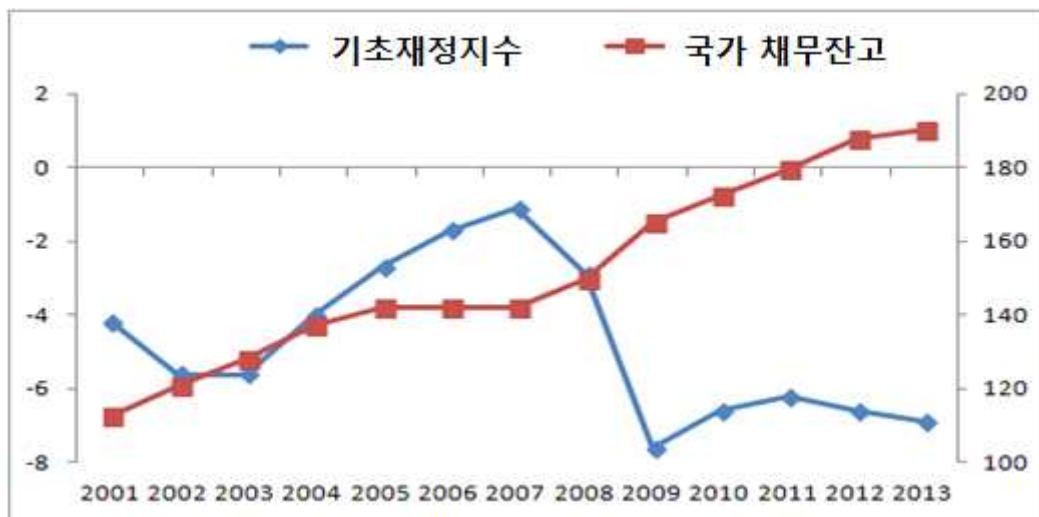
소비세 인상 조치 내용

1. 인상 배경

□ 막대한 국가재정 적자

- (재정 적자에 따른 세출 증가) 사회보장 관련 비용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 적자 심화
 -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비를 중심으로 세출은 증가하는 반면, 세수의 증가가 그 속도에 못 미치는 상황이 지속
 - 이러한 세출입의 불균형으로 일본의 국가 및 지방의 장기 채무 잔고는 2012년 말 약 940조 엔, GDP 대비 198%를 기록

국가와 지방의 기초 재정수지 및 장기 채무 잔고



* 자료원: 내각부

** 좌축: 기초 재정수지, 우축: 채권 등 국가 채무 잔고, 양 축 모두 GDP 대비이며 단위는 %

□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통한 재정 건전화 필요성

- (재원 부족) 기초연금의 국고부담 비율 증가
 - 2009년도에 국가가 부담하는 기초연금의 총당비용을 과거 기초연금의 3분의 1 수준에서 2분의 1로 증가
 - 국고부담은 약 2.5조 엔 증가했지만 이를 위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 과거 있었던 특별회계의 잉여금과 국채 발행으로 충당
 - (재정 건전화)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인 사회보장비용 증가 예상. 이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국가채무비율 축소를 통한 재정 건전화의 필요성이 부각됨

2. 추진경과 : 소비세도입 및 세율인상 추진 경과

□ 2013년 G8 정상회의, 일본에 중장기적 재정계획 수립 요구

- 일본의 국가신용도 하락 가능성 제기
 - 일본은 2011년 11월 G20 행동계획에서 소비세 인상 방침을 표명했던 적이 있어, 소비세 인상으로 일본의 국가신용도 하락을 방지하고 국채 폭락 가능성을 예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었음
 - 2012년 8월 당시 노다 정부는 소비세 인상과 사회보장세개혁 관련법을 통과시킴
 - 2013년 8월 G8 정상회의에서 중장기적인 재정 안정성 회복이 세계 경제 안정화에 필수라는 의견이 도출됨. G8 국가 중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가장 높은 일본에게 신뢰할 수 있는 중장기적 재정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음
 - 아베 총리는 2013년 10월 1일, 2014년 4월에 소비세율을 인상 (5%→ 8%)하기로 결정

소비세 인상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 일정

2014	4월 1일	소비세 5%→8%로 인상
	5월	정부여당, 경감세율 대상품목 선정방법 결정
	11월	7~9월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 발표
	12월	7~9월기 GDP 확정치 발표
		정부여당, 경감세율 구체안 발표
	12월(예상)	총리가 10% 인상여부 최종 판단
2015	10월	법률 통과시 소비세율 8%→10% 인상

자료원: 요미우리 신문(4.1)

3. 과거 소비세 인상에 대한 영향 분석

□ 1997년 소비세 인상 이후 가계소비 급감

- 1997년 소비세 인상(3%→5%)으로 2분기 이후 개인소비가 급감하여 경기 침체

*'97년 소비증가율 : 4.0%(1분기)→△5.4% (2분기)→1.6%(3분기)→△2.0%(4분기)

- 또한, 기업의 매출(법인기업 통계, 계절조정치¹⁾)도 1~3월의 경우 전 분기 대비 2.0% 증가를 보였으나, 이후 4~6월에는 4.4% 하락
- GDP 성장률도 1998년 2% 하락

*2.6%('96년)→ 1.6%('97년)→ △2%('98년)

4. 2015년 추가 인상 가능성(8%→ 10%)

□ 2014년 7~9월 경제지표 확인 이후 최종 결정 예정

- 일본정부, 7~9월 GDP 1차 속보와 경제상황을 감안해 최종 결정 예정
- (소비세율 8%→ 10%) 2%대의 경제성장률이 조건
 -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소비세 추가 인상 요건에 대해 이코노미스트 33명중 13명이 경제 성장률 2%가 필요하다고 답변
 - 7명이 1.5% 이하 경제 성장, 6명은 2.5% 이상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으며, 4명은 성장률에 관계없이 증세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

1) 경제분석에서 계절변동 요인을 제거한 것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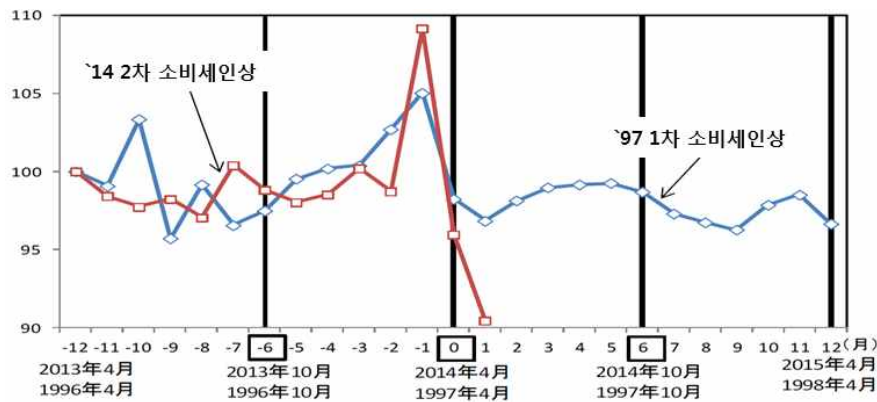
소비세 인상 이후 3개월 동향 분석

1. 소비세 인상에 따른 사전 수요(사재기)의 영향력

□ '97년 1차 소비세 인상 때 보다 가계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큼

- '14년 4월 가계소비지출의 감소 정도가 '97년 때에 비해 큼
 - 총무성의 가계조사 조사 통계에 의하면, 2014년 4월 소비수준 지수 동향에서의 사전 수요(사재기)와 소비세 인상 이후의 소비 감소량은 '97년 때에 비해 증가했음
 - *소비 수준 지수 3월 전월 대비 10.6% 증가, 4월 전월 대비 12.1% 감소
 - 그리고 5월의 움직임은 4월에 비해 다소 완화되었으나, '97년 증세 시의 감소량을 크게 초과했음 *5월 전월 대비 5.7% 감소
- 가구·가사제품, 교통·통신 분야 소비 감소율 증가
 - 품목별 소비수준 지수의 전월 대비 증가율을 비교하면 교육을 제외하고 '14년 1~3월에 걸쳐 실질적 가계소비는 크게 증가했으나, '14년 4월에는 큰 폭으로 감소했음
 - 감소율이 큰 것은 가구·가사제품, 교통·통신, 의료 등 품목이며, 전체적으로 '97년 4월에 비해 감소율이 큼
 - 5월의 소비 동향에서는 음식, 가구·가사 제품, 의류 및 신발류 등 생활필수품 분야 증가율은 증가로 전환했지만, 거주용, 공공·수도, 교육 등 품목의 하락률은 확대되어 소비수준 지수 전체의 저하로 이어졌음

월별 소비수준 지수(종합) 비교



* 자료원: 총무성 '가계조사', 미츠비시 UFJ 리서치&컨설팅 리포트

** 붉은색이 '14년 소비세율 인상, 푸른색이 '97년 인상, 서울 인상 1년전 수치를 100으로 지표화

2. 증세가 소매업에 미친 영향

□ 주요 분야별 소매 판매 동향 (내각부 7.25 발표 자료)

- (자동차 판매) 6월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동일한 수준을 유지
 - 자동차 판매 대수(경차 제외, 등록 기준)가 7월 셋째 주에는 전년 대비 매출의 감소폭은 다소 축소됐으나, 신형 모델 출시 등의 대규모 판촉 활동이 없어 판매는 제자리걸음 [산업 협회 A]
 - 경차 판매 대수(신고 기준)는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측
- (가전대형소매점) 7월 셋째 주 주요 5개 품목의 판매량 증가
 - 무더운 날씨로 인한 에어컨 판매가 전년 대비 플러스를 기록. TV도 월드컵 특수로 상승세 회복
- (식료품) 7월 셋째 주 전년 대비 약 6% 감소
 - 7월 매출은 소폭 감소했으나, 당월 매출 부진의 이유는 갑작스런 기후 변화에 따른 계절적 요인이 컸던 것으로 보고 7월 이후에는 매출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됨
- (대형백화점) 여름 할인 행사로 매출증대
 - 7월 말 할인 행사로 인해 백화점 매출은 전년 대비 증가. 보석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의 매출이 전년 대비 대부분 증가

3. 소비심리, 기업구매심리 등 전망지표

□ 6월 내각부 조사에서 경기동향지수 상승

- (경기동향지수 호전) 2개월 연속 상승
 - 6월 경기동향지수(DI)는 47.7로 전월 대비 2.6 포인트 상승으로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임
 - 그러나, 3개월 연속으로 보합세²⁾ 지수인 50을 밑돌음. 기업 및 가계 동향지수는 상승, 고용 관련 지수는 하락
- 내각부, “경기상황은 미미하지만 회복세를 띄고 있다.”
 - 내각부는 “경기상황은 미미하지만 회복세를 띄고 있어, 소비세 인상 에 따른 갑작스런 수요 감소의 여파도 희미해지고 있다.”고 발표
- 제조업의 매출은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임
 - 운송 장비 등의 분야에서는 일본 국내의 경우 소비세 증세에 따른 매출 감소가 예상되지만, 해외시장의 수요는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
 - 전자기기와 관련해서는 4K텔레비전³⁾ 모니터 시장의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판매량은 유지되고 있으나, 원료 가격, 운송비, 전력사용 등의 비용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반해 판매가 인상은 여의치 않다.”(토카이소재 화학공업업체)는 우려도 있음

2) 가격이 거의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시세

3) 디스플레이 패널의 화질이 FULLHD의 4배. 3840(약4000) × 1000 의 화질

III

일본정부의 대책과 향후 계획

1. 일본정부의 대책 및 향후 예상되는 조치

□ 기업 감세를 위한 경제 대책 준비

- 일본 정부, 기업 감세를 위한 5조엔 규모의 경제 대책 표명
 - － 첨단 설비를 도입한 기업에 대한 감세 제도를 신설하고, 임금을 인상한 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 제도를 확충한다는 계획
 - － 감세 혜택으로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면, 그것이 임금상승과 고용확대로 이어져 가계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일본 정부의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대응책

	국비(조엔)	사업규모(조엔)
경쟁력 강화책	1.4	13.1
여성·약자·고령자·장애인 대상 시책	0.3	0.4
동일본대지진 부흥, 방재·안전대책 가속화	3.1	4.5
동일본대지진 피해지 복구 및 부흥	1.9	2.4
국토강인화, 방재, 안전한 사회실현 등	1.2	2.1
저소득자·자녀교육 세대에의 지원	0.6	0.6
합 계	5.5	18.6

*자료원: 재무성

- ‘경기의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경제 대책
 - － (경제대책 발표) 일본 내각부는 소비세 증세 후 경기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추경예산 편성 및 국가사업 추진(7. 28 발표)
 - － 일본 정부는 이 경제대책의 조기 집행을 통해 급격한 경기하락을 방지, 경제 성장을 실현한다는 목표임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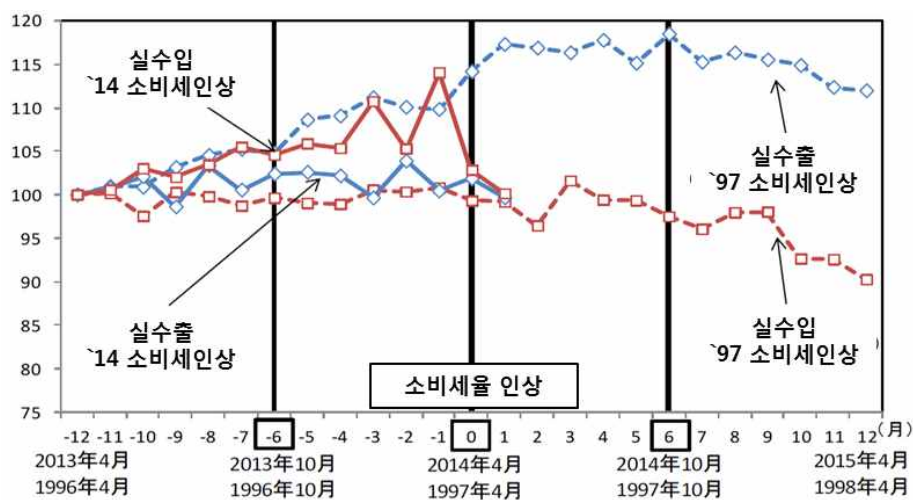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1.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

□ 일본, 증세 이후 실수입 하락세

- 순수출(실수출-실수입)은 증가
 - 일본은행 발표 실수입 통계를 보면, 증세 후 수입은 서서히 하락하고 있는 반면 수출은 증가 추세로, 결과적으로 순수출 (=실수출 - 실수입)의 증가로 실질 GDP를 뒷받침
 - 실수입의 경우 소비세 인상 직전 사전 가수요(사재기)로 인해 2014년 1월 이후 크게 증가했으나, 4월은 전월 대비 9.9% 감소했으며, 5월에도 2.6% 하락

실질수출입 비교(월별)



* 자료원: 일본은행 '실질수출입', 미츠비시 UFJ 리서치&컨설팅 리포트

** 세율 인상 1년전 수치를 100으로 지표화

□ 한국의 대일 수출

- 한국의 대일 수출의 금액은 감소했으나, 증가율 변화는 미미함
 - 전반적으로 소비세 증세 이전(`14 1~3월)과 증세 후(`14 4~6월)에 금액은 감소했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큰 변화 없음. 증세로 인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임

한국의 대일 수출 금액(수출 상위 10개 품목), 소비세 인상 전후 비교)

(단위: 10억 엔)

HS	품목	Jan-Mar 2013		Jan-Mar 2014		Apr-Jun 2013		Apr-Jun 201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대한민국	882	5%	921	4%	799	0%	833	4%
27	Mineral Fuel, Oil Etc	304	23%	201	△34%	133	△25%	138	4%
85	Electrical Machinery	145	△4%	165	14%	187	15%	180	△4%
72	Iron And Steel	59	△22%	89	50%	61	△15%	81	33%
84	Machinery	71	12%	84	18%	77	17%	81	5%
00	Special	26	△15%	57	120%	26	11%	28	8%
39	Plastic	34	4%	41	20%	39	11%	41	4%
71	Precious Stones, Metals	33	25%	36	9%	39	△3%	31	△21%
29	Organic Chemicals	28	38%	25	-8%	36	18%	33	△9%
87	Vehicles, Not Railway	13	1%	21	58%	15	17%	20	29%
73	Iron/Steel Products	16	△3%	20	27%	17	△3%	20	19%
90	Optic, Nt 8544; Med Instr	11	△24%	14	27%	12	△6%	12	4%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2. 대 일본 투자 유치

□ 일본의 대 한국 직접투자에 미친 영향

- 일본의 대외 직접투자가 다소 감소
 - 증세 전후로 일본의 해외 직접투자금액이 감소세를 보임.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직접투자금액도 감소했으나, 이것을 일본의 소비세 인상과 연결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일본의 대외 직접투자 비교(대세계, 대 한국)

(단위: 억엔, 증감율은 전월대비)

2014년	전세계						대한민국					
	Execution		Withdrawal		Net		Execution		Withdrawal		Net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1월	65,021		52,417		12,604		471		204		267	
2월	55,388	△15%	48,860	△7%	6,528	△48%	580	23%	142	△30%	438	64%
3월	69,763	26%	62,523	28%	7,239	11%	722	24%	304	114%	418	△5%
4월	62,789	△10%	56,693	△9%	6,096	△16%	271	△62%	83	△73%	187	△55%
5월	57,500	△8%	50,143	△12%	7,356	21%	332	23%	317	282%	15	△92%

* 자료원: 재무성 국제수지통계

V

시사점

□ 증세가 한·일 무역 및 투자에 미친 영향은 미미

- 한국의 대일 수출 금액은 감소했으나 증가율 변화는 미미
- 일본의 대외 직접투자가 다소 감소해 대한국 투자금액도 감소했으나 이것을 소비세 증세와 연관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 국적과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소비세 인상의 영향은 크지 않음

- 대일 수출입 원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 증가
 - － (상품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소비세 증세에 따라 대일 무역 비용의 인상은 불가피
 - － (상품가격 인상) 다만, 소비세는 기업의 국적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일정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소비세 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가격인상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품질 경쟁력 필요
 - － (저가정책의 한계 인식)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가격인상에 따른 매출의 감소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 강화와 함께 상품의 고부가가치화 정책이 필요



참고자료 : 지역경제 보고4) - 사쿠라리포트

일본은행, 전 지역에서 경기회복세 보임 ('14.07.07)

- 경기상황은 전체 9개 지역 모두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전 지역에서 소비세 인상 직전의 사전 가수요(사재기)로 인한 소비 감소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앞으로의 경기에측에 변동 없음
 - 세부적으로는 2개 지역이 '회복지속', 다른 2개 지역은 '현상 유지', 나머지 5개 지역은 '서서히 회복'임 (지난 4월과 동일)

□ 소비세 인상 이후 각 지역 경기동향

지역	2014년 4월 조사	비교	2014년 7월 조사
홋카이도	소비세 인상에 따른 불안함을 보이나 서서히 회복중	⇒	소비세 인상에 따른 소비감소 현상이 곳곳에서 보이지만 서서히 회복중
도호쿠	소비세 인상에 따른 불안함 존재하나, 회복 추세	⇒	소비세 인상에 따른 소비감소 현상이 보이나, 회복 추세
호쿠리쿠	소비세 인상에 따른 사재기 현상 및 소비감소의 영향은 있으나 서서히 회복중	⇒	소비세 인상에 따른 사재기 현상 및 소비감소의 영향은 있으나 서서히 회복중
간토 코산에츠	소비세 인상에 따른 불안함을 보이나 서서히 회복중	⇒	소비세 인상에 따른 소비감소 현상이 곳곳에서 보이지만 서서히 회복중
도카이	소비세 인상에 따른 사재기 현상 및 소비감소의 영향은 있으나 서서히 회복중	⇒	소비세 인상에 따른 사재기 현상 및 소비감소의 영향은 있으나 서서히 회복중
킨키	소비세 인상 영향에 따른 불안함을 보이나 서서히 회복중	⇒	소비세 인상에 따른 소비감소 현상이 곳곳에서 보이지만 서서히 회복중
츄고쿠	소비세 인상 영향에 따른 불안함을 보이나 서서히 회복중	⇒	소비세 인상에 따른 소비감소 현상이 곳곳에서 보이지만 서서히 회복중
시코쿠	소비세 인상 영향에 따른 불안함을 보이나 서서히 회복중	⇒	소비세 인상에 따른 소비감소 현상이 곳곳에서 보이지만 서서히 회복중
큐슈· 오키나와	소비세 인상에 따른 사재기 현상 및 소비감소의 영향은 있으나 서서히 회복중	⇒	소비세 인상에 따른 사재기 현상 및 소비감소의 영향은 있으나 서서히 회복중

4) 지역경제보고 (일명 「사쿠라(さくら)리포트」는 일본은행 전 지점이 조사한 지역별 금융경제상황을 9개 대형지점이 취합하여 매분기 개최되는 일본은행 지점장 회의에서 발표(2005년 4월부터 작성)

□ 부문별 각 지역 경기동향

○ (공공투자)

도호쿠 지방은 대폭 증가. 3개 지역 (홋카이도, 도카이, 추고쿠)에서 증가. 또한 5개 지역(호쿠리쿠, 간토코신에츠, 킨키, 시코쿠, 큐슈·오кина와)에서는 높은 수준 유지

○ (설비투자)

홋카이도, 도카이 지방에서 한층 증가. 4개 지역(도호쿠, 호쿠리쿠, 간토코신에츠, 킨키)에서 증가. 3개 지역(추고쿠, 시코쿠, 큐슈·오кина와)에서는 회복. 꾸준한 판매실적을 유지. 업계에서는 “비제조업 중심으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음

○ (가계지출)

고용·소득여건 등의 개선에 힘입어 홋카이도, 호쿠리쿠, 도카이, 시코쿠, 큐슈·오кина와 등 5개 지역은 서서히 회복 되고 있고 토호쿠, 칸토, 킨키, 추고쿠 등 4개 지역은 안정세 유지(회복조짐)
－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동차, 가전 등 내구소비재와 사치품은 한때 소비가 감소했었으나 소비세 인상이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작아지고 있음. 한편, 여행관련 수요에는 변동 없음

○ (주택투자)

소비감소 현상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3개 지역(도호쿠, 시코쿠, 큐슈·오кина와)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 4개 지역(간토코신에츠, 도카이, 킨키, 추고쿠)에서 “전체적으로 준수함”, 호쿠리쿠에서는 하락세가 멈춤

○ (광공업생산)

소비세 인상의 영향은 있었지만, 4개 지역(홋카이도, 도호쿠, 간토 코신에츠, 추고쿠)의 생산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3개 지역(호쿠리쿠, 도카이, 킨키)에서는 높은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 시코쿠지역의 생산량은 서서히 회복 중에 있으며, 큐슈·오кина와지역에서는 큰 변화 없었음

－ 업종별로는 수송기계, 전기기계, 화학이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일반기계도 증가하였고 철강, 금속제품, 요업·토석 분야는 높은 생산 수준 유지

○ (고용·소득) 전 지역에서 노동 수급 상황이 개선

고용상황은 7개 지역에서 개선되거나, 앞으로 개선될 조짐이 보임

부문별 각 지역경제 상황

지역	공공투자	설비투자	가계지출	주택투자	생산	고용·소득
홋카이도	증가하고 있음	경기가 서서히 회복 중. 매출과 수익 요건이 개선되어 투자 증가	고용·소득환경 개선을 바탕으로 서서히 회복	계속해서 감소	국내외 꾸준한 수요를 배경으로 증가	노동수급은 단계적으로 개선 중, 고용자소득은 회복
도호쿠	재해복구 관련 공사를 중심, 큰폭 증가	증가하고 있음	다소 지출이 감소했으나, 일정수준 유지	지진 피해 지역 공영주택 건설로 높은 수준 유지	소비감소했으나, 전체적으로 서서히 증가	고용·소득 환경 개선

지역	공공투자	설비투자	가계지출	주택투자	생산	고용·소득
호쿠리쿠	높은 수준 유지	제조업을 중심으로 증가	전체적으로 서서히 회복	소비감소 있었으나, 하락세는 멈춰있음	높은 수준 유지	고용·소득 환경 개선
간토 코신 에츠	높은 수준 유지	증가 추세	소비감소 있었으나, 고용·소득환경이 개선되어 회복세	소비감소 있었으나, 변동 미미	소비감소현상을 받으나, 전체적으로 서서히 증가	고용·소득 환경 개선되면서 고용자소득도 개선
도카이	증가 추세	한층 더 증가	소비감소 있었으나, 고용·소득환경이 개선되어 회복세	소비감소 있었으나, 변동 미미	수요 감소에 대비해 생산이 감소한 곳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 유지	고용·소득 환경 개선
킨키	높은 수준 유지	증가 추세	소비감소 있었으나, 고용·소득환경이 개선되어 회복세	전체적으로 영향 미미하나 소비세 인상 충격 계속됨	소비인상에 따라 생산량 다소 감소했으나, 미미한 변동	고용·소득 환경 개선, 고용자소득 회복세
츄고쿠	증가 추세	회복 추세	소비감소 있었으나, 고용·소득환경이 개선되어 회복세	현상 유지	서서히 증가 추세	고용·소득 환경 개선 고용자소득 회복 추세
시코쿠	높은 수준 유지	회복 추세	소비감소 있었으나, 고용·소득환경이 개선되어 회복세	높은 수준 유지	서서히 회복	고용·소득 환경 개선, 고용자소득 회복 추세
큐슈·오кина와	높은 수준 유지	단계적으로 회복중	소비감소 있었으나, 고용·소득환경이 개선되어 회복세	증가세가 한풀 꺾임	전체적으로 현상유지, 곳곳에서는 증가하는 움직임도 있었음	고용·소득 환경 개선, 고용자소득 회복 추세

□ 소비세 인상 이후 각 지역의 가계 지출 동향 및 기업 대응

- (소비관련 기업의 태도) 각 지역의 상당수 기업은 소비세 인상 후에도 소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
 - 일본의 고용·소득환경이 개선으로 고품질·고부가가치, 편리성 중시 등의 다양한 지출 형태 확산. 또한, 활동적인 노년층이나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가 뒷받침
- 한편, 불필요한 지출의 억제와 소비의 강약을 조절 등의 부정적인 소비자 심리와 실질소득 저하에 따른 영향이 시간차를 두고 나타날 가능성도 지적
- (기업의 판매전략)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기업의 가격 인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판매가격을 인상한 이후에도 대부분의 기업이 매출이 줄어들지 않아, 새로운 가격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
 - * 각 기업은 가격체계 변경에 따라 (1) 가격보다 품질이나 기능을 중시한 신상품 적극 투입 혹은 상품 라인업 확충(고품질·고가격대 제품 구비 충실) (2) 새로운 부가가치를 추가한 점포 리모델링, (3) 온.오프라인 판매망 융합, (4) 인건비 인상에 수반한接客·서비스 품질향상을 추진
 - 세금 미포함가격의 표시 허용으로 대부분의 업체가 소비세 인상분을 판매가격에 전가하였으며 일부 소매업체, 음식·숙박서비스 업체 등은 과거 비용 증가분까지 판매가격에 전가
 - 향후, 경쟁사 동향을 관망하던 기업이나 비용 증가분을 충분히 전가하지 못한 기업을 중심으로 가격인상, 고가의 상품·서비스 확충이 예상 되 당분간 가격인상 움직임은 이어질 전망
 - 한편, 경쟁이 치열한 소매(슈퍼, 할인마트 등)에서는 PB상품이나 대표상품에 한해 가격을 유지하거나 인하하는 움직임도 보임.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비용 증가분을 가격에 전가시키는 것이 늦어졌거나, 가격인상이 곤란하다는 의견도 있어 소비 시장이 약세를 보일 경우 이러한 움직임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

- (전망) 가계지출은 고용·소득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전제로 여름 이후 소비세 인상의 영향이 줄어들면서 일정 수준 유지를 전망
 - － 이를 반영해 기업에서는 이번 소비세 인상을 계기로 코스트 삭감에 따른 저가정책에서 벗어나 고가·고부가가치화전략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확산될 전망



작성자

◆ 도쿄무역관	박은희 과장
◆ 선진시장팀	김광수 차장



Global Market Report 14-031

일본 소비세 인상 이후 3개월 동향 분석

발행인 | 오영호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4년 8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www.globalwindow.org

Copyright © 2014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새로운 5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